

「세계대세와 한국의 장래~ 21세기에 본 고하 송진우」

윤평중 (한신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1945년 12월 30일, 해방정국의 광풍(狂風)이 고하 송진우(1890~1945)를 휩쓸고 갔습니다. 전날 새벽까지 밤을 새며 계속된 민족지도자 연석회의에선 반탁 민족주의 열풍이 거셌습니다. 당시로선 자연스런 민심의 흐름이었지만 세계대세엔 어두웠다는 한계가 엄존합니다.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독립 주권국가 수립의 걱정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모두가 격양돼 있는 자리에서 건국의 열정을 프로네시스(phronesis·실천지·實踐智)의 신중함과 결합한 지도자는 고하뿐이었습니다. ‘반탁에 찬성하지만 세계정세를 정확히 판독한 이후에 차분히 대응하자’는 그의 입론은 격렬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반민족주의자’라는 비난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민족적 열정이 이성적 성찰을 무력화하는 순간에도 고하는 의연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주변의 우려를 일축합니다.

고하 송진우는 빼어난 한국 민족주의자이자 코스모폴리턴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드문 공적 인간이었고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통합한 시민적 민족주의자였습니다. 평생을 독립을 위해 분투했지만 고하의 실천은 철저히 객관적 현실 위에서 건국의 이상으로 한걸음씩 나아갑니다. 민주공화제에 바탕을 둔 고하의 이상주의적 현실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뿌리인 3·1운동을 낳았고 제헌헌법으로 부활합니다.

고하는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를 1925년 동아일보에 발표합니다. 지금 읽어도 전혀 낡지 않은 명문입니다. 30대 후반인 그가 당대 세계의 누구보다 세계사의 흐름에 정통했음을 증명합니다. 한마디로 고하는 역사의 급소를 짚고 있습니다. 총체적 대(大)변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21세기에 본 고하 송진우」라는 부제로 「세계대세와 대한민국의 장래」를 논하는 이유입니다. 현재는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선취함으로써 항상 새롭게 정의됩니다.

고하는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에서 침략적 제국주의의 발호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는 세계사의 흐름에 주목합니다. ‘건곤일척의 구주대전’에 편승한 일제가 1차대전 전승국으로서의 발언권과 영·일 동맹을 기반으로 패권

국가로 굴기하고 있지만 그 강성(強盛)함이 몰락을 내장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고하의 사유가 일본 제국주의 극성기에 표출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일제의 위세가 대단해 보이지만 ‘자본주의의 모범인 미국과 사회주의의 대표인 적로(赤露·공산주의 러시아)’가 태평양을 두고 경합하는 현실에서 기실 ‘좌우협공의 위란(危卵)’에 빠져있다는 분석입니다. 헤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반도와 만주를 식민화하고 중원을 점령한 뒤 아시아·태평양 전체를 침탈하려는 일제가 궁극적으로 ‘일·미 충돌’을 불러올 것이며 그것은 ‘미·러 충돌’의 전조일 것이라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팽창이 태평양전쟁을 낳고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에서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위당 정인보가 찬탄하듯 고하의 통찰은 ‘세계의 전도(前途)를 논한 것이 20년을 지나서도 맞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적확합니다. 세계대세를 꿰뚫는 안목은 열정의 소용돌이가 빛은 해방정국의 혼미로부터 그가 성찰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고하는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좌우 극단을 멀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통섭하고자 했습니다.

고하가 제국주의를 규탄한지 100년이 지난 2023년 오늘, 신(新)제국주의의 태풍이 세계를 위협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피와 땀으로 쌓은 ‘하나의 세계’ 이념과 인류 보편의 가치규범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인류 집단지성의 육화인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자신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大)유라시아주의를 내세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그 국민을 대량 살상하고 영토를 강제 병합했습니다. 대(大)중화주의를 앞세운 중국의 대국 굴기는 대만 무력통일을 공언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전체에 전쟁의 암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에서 고하는 ‘춘추(春秋)에 무의전(無義戰) 필법’(국가들의 다툼에 영원한 정의는 없다는 뜻)을 적용하면 열강의 쟁투는 ‘폭력으로 폭력을 대치하는 데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국제정치의 무정부상태를 전제하는 도저한 현실주의입니다. 하지만 참혹한 현실에 발 딛고 선 고하의 묘미는 그가 마냥 현실론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고하가 고난을 무릅쓰며 3·1운동을 기획·실행한 것, 암흑의 현실을 뚫고 평생을 독립과 건국에 바친 것은 ‘민족적 자존과 인류적 공영이라는 정의’의 이상이 ‘세계적 대(大)여론’이며 세계대세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고하의 현실주의적 이상주의는 ‘자유·생존·평화의 3대 이상’을 고취합니다. 자유·생존·평화의 토대 위에서 ‘민족적 자유와 사회적 생존권, 세계평화’를 역설합니다. 오늘날 고하를 주체적으로 읽는 우리의 작업은 모든 종류의 신(新)

제국주의에 대한 결연한 반대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것, 즉 힘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를 변경하고 타국 국민을 복속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는 현대세계의 보편 원칙에 반(反)합니다.

유엔헌장 1조 1항은 “국제연합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목적을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고 선언합니다. 유엔헌장 1조 1항은 단순한 수사(修辭)가 아닙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3백년 간 쌓아온 인류 집단지성의 상징이고 현대세계를 규율하는 정언명법입니다. 유엔 헌장이 선포한 바, 국제평화를 파괴하는 침략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유엔의 사상 최초 집단적 조치가 지켜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있는 독립헌충원이 웅변하는 역사의 진실입니다.

1990년대 초 세계냉전이 종식된 이래 미국이 주도한 단극적 자유주의 세계 질서는 중국의 양극 세계질서 정립 시도와 러시아의 다극 세계질서 정립 공세로 도전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21세기 세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그 최종적 향배는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대세와 한국의 장래」를 탐색하는 우리는 현재의 지구 전체에 대한 공시적 인식과 한·중·일 3국 교섭사의 지평에서 한반도 역사를 보는 통시적 조망을 통합해야 합니다.

한반도 역사의 공시적·통시적 이해가 가리키는 「세계대세와 한국의 장래」는 아래 명제로 압축됩니다. 한반도는 도합 네 차례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의 도전에 직면했으며 그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역사입니다. 7세기의 삼국통일, 16세기의 한·중·일 7년 전쟁, 20세기의 6·25전쟁이라는 세 차례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에 이어 지금 우리는 21세기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 한 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고하는 이미 1925년에 ‘세계대세의 조류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을 거쳐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풍운이 야기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계를 뒤흔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만일 대만해협에 화염이 인다면 그 화란(禍亂)은 한반도를 직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2천 년간 지속된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의 정치철학에서 나온 투명한 예측입니다. 만약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이 열전(熱戰)으로 비화한다면 그것은 세계 그레이트 게임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큽니다. 한반도와 인류의 명운이 함께 걸린 우리 시대 최대 현안입니다.

100년 전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를 해명한 고하의 고뇌를 우리가 곱씹어야 할 까닭입니다. 우리는 신(新)냉전이 신(新)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결단코 막아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신열전의 개연성에 대비하는 국가대계 수립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1세기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의 지평에서 「세계대세와 한국의 장래」를 인식하고 그 도전에 응전하는 것은 모든 한국인의 준엄한 의무입니다.

역사를 벌미 삼아 무력으로 타국 국경과 현상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군사적 모험주의가 빈발하고 세계 질서는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보편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어떤 국가도 현대 문명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하가 역설한 ‘자유·생존·평화’의 이상은 좌우, 세대, 문화, 종교, 성별을 뛰어넘어 인류 전체를 서로 만나게 하는 현대세계의 준칙입니다. ‘민족적 자유와 세계평화, 사회적 생존권’은 지구 시민의 근본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세계대세 진단에 이어 대한민국의 장래를 논구하기 위해서는 고하가 이끈 3·1 운동을 재조명해야 합니다. 3·1운동이 한반도 역사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1919년 3·1운동의 정신은 같은 해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열매 맺습니다. 임정의 사상적 핵심은 모두 10개조로 구성된 임시헌장으로 압축됩니다.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근본 규정은 임시정부 일곱 차례, 대한민국 헌법 아홉 차례 개헌 과정에서도 전혀 바뀌지 않았고 현행헌법 1조 1항으로 이어집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조선 왕조 복벽(復辟)이나 대한‘제’국 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포합니다. 한반도 역사의 패러다임 대(大)전환입니다. 고하 말대로 ‘조선민족은 3·1운동을 신기축(新機軸)으로 새 빛을 보게’ 됩니다. 유럽에서도 민주공화국 개념이 헌법에 명기된 시기는 1920년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3·1운동이 선취한 민주공화제의 정립은 그만큼 선구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 인민(demos)의 통치(kratia)이듯 공화국은 ‘우리 모두의 것’(res publica·공공성)이란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고하는 1924년 『개벽』지에 게재한 「무엇보다도 ‘힘’」이라는 글에서 공공성의 사활적 의의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힘의 실체는 ‘단결력’입니다. “만일 강자가 되자면 힘이 있어야 되겠고, 힘이 있자면 단결하여야 되겠고, 단결하자면 각 개인의 봉공심(奉公心)을 환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고하는 외칩니다. 나아가 그는 “조선문제는 민족 자체의 단합이 확립하는 그날로부터 해결될 것이다.”라고 호소합니다.(「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고하는 「자유권과 생존권」(『삼천리』 1932년 4월호)이라는 글에서 공동체 최

락의 근본 원인을 해명합니다. 자유권과 생존권 양대 이념이 상호 선순환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배척하는 현실이 갈등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자유권을 얻고자 한 인류의 투쟁은 빛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자유로운 개인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꽃피었고 근대 시장의 생산력과 혁신정신이 사회를 풍요롭게 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렸습니다.

하지만 고하는 “자유권의 극단적 발전이 경제상으로는 세계대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동시에 모처럼 얻었던 정치적 자유권까지 유린하게 된 기현상”을 비판합니다. 자유권의 근간인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도 사적 권리가 아니라 공적 권리이므로 소유권만을 사적 권리에 복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소유권의 무제한적 옹호가 낳은 20세기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예측한 탁견입니다. 자유권과 생존권은 새의 양 날개 같이 인류를 이끄는 쌍두마차라는 것입니다.

자유권과 생존권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하의 논변은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교호작용에 대한 성찰로 진화합니다. 자유권운동으로 시작한 민족운동과 생존권운동으로 출발한 사회운동은 ‘해방의 정신’에서 서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유권을 요구하는 민족운동이 생존권을 아울러 주장하게 되고 또한 생존권을 주장하는 사회운동이 아울러 자유권을 주장하게 된 것”은 인류 보편사의 불가역적 흐름입니다. 고하는 이를 ‘자유가 없고 생존의 보장까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라고 절규합니다.

고하의 사자후는 현대 한국사회를 통타(痛打)합니다. 대한민국은 장엄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유사 이래 최고의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사회가 한국과 한국문화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빛이 찬란한 만큼 그림자도 짙습니다. 고하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격상된 한국에서 젊은이들은 혼인과 출산을 거부합니다.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악입니다. 사회 전체가 르상티망에 잠겨있습니다.

배고팠던 ‘헝그리 사회’를 넘어서자 분노 가득한 ‘앵그리 사회’가 우리를 압박합니다. 적대와 분열이 나라 전체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우리 모두의 것’이기는커녕 ‘그들만의 것’이라는 대중의 분노가 팽배합니다.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레스 프리비타(res privata)로의 퇴행, 즉 공공의식의 쇠멸이야말로 위기의 근원입니다. 나라의 본질인 공화국(Republic)을 가리키는 개념인 Commonwealth(‘더불어 잘 삶’)의 정신이 사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공동체를 경영하는 정치권에서의 공공심 실종이 치명적입니다.

한국사회의 적대와 분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로 역사관과 정치관이 부딪힐 때 우리는 상대방과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을 틀렸

다고 비난합니다. 예컨대 국가 상징거리인 광화문광장에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주석 동상을 우리가 함께 세울 수 있겠습니까? 김대중·박정희 두 대통령 초상을 대화민국 화폐 도안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고하 송진우에 대한 역사적 평가조차 분열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고하를 자산계급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우익 보수주의자라고 폄하하는 일각의 서술은 사실과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의 지평을 좁히는 치명적 단견입니다.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를 설파한 고하의 안목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그의 삶은 한국 역사에서 드물게 공심(公心)으로 일관한 것이었습니다. 고하 송진우는 단연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가운데 한사람이었습니다.

고하는 자유의 미명 아래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던 자유지상주의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합친 사회적 자유주의이며 사회민주주의와도 가깝습니다. 고하가 사회적 자유주의의 신념을 언술(言述)에 제한하지 않고 자신의 공적 삶에서 실천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하 송진우를 기리고 있습니다. 고하가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를 고뇌했듯 우리는 「세계대세와 대한민국의 장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가 총언하듯 공공의식에서 우리나라 단결력이 전제되어야 더불어 잘 살 수 있고 세계대세에 투철해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비록 정치관과 역사관이 달랐을지언정 김구·이승만·김규식·여운형·조봉암·김성수·송진우 같은 지도자들은 국민통합의 시각에서 보면 조국을 되찾고 나라를 세우는 데 헌신한 분들입니다. 넓고 깊게 한국 현대사를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강은 이들 민족 지도자들의 공과 과가 담긴 지류들을 모두 품에 안을 수 있을 만큼 장대합니다. 그것이 고하가 꿈에서도 그리워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고하 송진우는 사거(死去)했지만 그가 청사(靑史)에 아로새긴 민주공화국의 꿈은 살아 약동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성취 위에서 공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대사의 거인 고하와 더불어 공화혁명의 시대로 동행하는 동료 한국 시민인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